

# 북한 정세 인식과 대북 정책(햇볕 정책)

권민웅 /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 머리말

**기**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론'과 '햇볕 정책'이 북한의 잠수정 침투 사건과 무장 간첩 기도 사건 발생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햇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방침은 북한 잠수정 및 무장 간첩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가 마치 '북한에 주기만 하는 정책'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서, 용어 상의 혼란을 불식하고 안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대북 정책에 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필자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햇볕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이상 '햇볕' 용어를 쓰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차제에 이번 '햇볕' 논쟁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햇볕 정책 논란의 원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이른바 '햇볕 정책'은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정경 분리 정책에 입각한 포용 정책'으로서 북한이 스스로 개방하도록 이끄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햇볕론'이 내세우고 있듯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냉전 고수적인 '압박'과 '대결'보다는 '이해'와 '포용'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햇볕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먼저 새정부 당국자 스스로가 '햇볕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이 햇볕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기 위한 서투른 논리를 전개한 데 원인이 있다 하겠다.

지난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의 도발 불용·우리의

이번 햇볕 정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우리 대북 정책들이 겪어온 공통적인 딜레마는 그 내용의 타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정책의 추진 과정 즉, 방법과 운용에서 크게 연유하고 있다.

흡수 통일 불원·남북간 화해와 교류 협력이 라는 3원칙을 발표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새 정부는 '햇볕론'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게 됨으로써 이른바 '햇볕 정책'은 대북 3원칙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도발 불용 원칙에 따라 마땅히 강력한 응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북한 잠수정의 침투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당국자의 미온적인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신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아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 발생 초기, '침투인지, 표류인지' 사건의 성격 규명에서부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가 명백한 침투 도발로 확인된 이후에도 단호한 응징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앞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햇볕 정책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하면서 남북 관계의 악화와 햇볕 정책의 손상을 더욱 염려하는 투였다. 그러다 20여 일 후에 북한 공작원의 침투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을 통해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시인과 사과 그리고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등 첫번째 사건

때보다 강력한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의 침투는 우리의 햇볕 정책에 위협을 느낀

북한의 강경파가 우리의 대북 정책을 대결로 바꾸게 만들려고 일으킨 것"이라고 하면서 "햇볕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 당국자들이 굳이 무장 간첩 침투와 '햇볕 정책'을 결부시키면서 부적절한 논리 구사로 '햇볕 정책'을 옹호하려는 데서 햇볕 논쟁을 더욱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번 햇볕 정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우리 대북 정책들이 겪어온 공통적인 딜레마는 그 내용의 타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정책의 추진 과정 즉, 방법과 운용에서 크게 연유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반세기가 이르도록 남북간 편지 한 장 주고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 숲한 대북 정책들이 별다른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찢기고 갈아 끼워져오고 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란 한마디로 분단 극복 노력이다. 남북간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접근 과정이며 방법이다.

대북 정책이 실효를 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바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북 정책의 요체이고 전부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호응(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즉,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까? 하는 강·온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부터 대북 정책의 기초와 방향이 설정된다.

### 북한의 정세 인식

대북 정책의 기초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와 북한 정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평화 통일이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우리 남한 국민들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와 대남 혁명전략을 고수한 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포용 정책을 내세우며 무장 해제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북 포용 정책(햇볕 정책)을 옹호하는 일부 견해에서 “남북의 강경 냉전 세력은 적대적 상호주의 전술로 불신과 대결을 증폭시켜왔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의 입지를 강화시켜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하고, “강등

경험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의 북한 정세를 살펴보면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은 물론 체제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개방만이 살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본주의 세력들이 말하는 개혁·개방은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책동’이라고 하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이 기대하고 있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과 속초에서 생긴 사건으로 ‘햇볕론’은 남북 강경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었다”면서 “햇볕론을 일관성있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지는 지금까지 북한의 무장도발은 북한 일부 강경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번 동해안의 잠수정과 무장 간첩의 침투 도발 사건도 남한의 온건 햇볕론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행된 것으로서, 남한의 보수 강경론자들에게 입지를 강화시켜 대북 포용 정책을 포기토록 만들려는 것이므로 “이에 겁을 먹지 말고 햇볕론을 계속 추진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북한에서 대남 정책 노선과 관련하여 강·온 세력이 나뉘어져 서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투쟁(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기 의문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의 보수 강경론자들이 북한의 강경 세력들과 적대적이거나 ‘공생 관계’에서 불신과 대결을 더욱 증폭시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경험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처럼 북한이 체제 유지와 남조선 혁명의 필요성에 따라 대남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함은 마땅하다. 군사적 도발에 대한 응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보적 조치일뿐더러,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의지를 포기시키고 정책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북한 정세를 살펴보면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삶은 물론 체제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개방만이 살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자본주의 세력들이 말하는 개혁·개방은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책동'이라고 하면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이 기대하고 있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체제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는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삶과 체제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支柱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그리고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이라는 3대 신앙이다. 그리고 이들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경배와 충성심을 불어넣는 축매가 바로 '긴장'인 것이며, 긴장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남북관계에서의 긴장인 것이다. 즉,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대

남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하여 주민을 통제하는 한편 '남조선 혁명' 정세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체제 유지와 남조선 혁명의 필요성에

따라 대남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함은 마땅하다. 군사적 도발에 대한 응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보적 조치일뿐더러,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 의지를 포기시키고 정책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포용 정책으로 관용만 한다면, 그들은 대남 전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면서 계속적인 도발로 긴장을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차제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일부 강경 세력들에 의해 그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일부 견해들에 대해 필자의 식견으로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체제 생존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지언데, 어찌 일부 강경 세력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감행될 수 있겠는가? 서방 자유 민주 국가에서도 군사적 행동은 최고 통수권자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물며 북한 군부가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뜻을 어기면서

국제 여론에 역행하는 대남 도발을 자행할 수 있을 것인가? 지으기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에 있어 혁명 전략 고수와 개혁·개방의 양자 택일의 선택 시기가 점차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혁명 전략 고수에 입각한 최후 수단인 동원(무력 도발)에 대비한 안보 태세 확립과 개혁·개방으로의 전환에 따른 협력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데,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이 없이,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때이다.

## 대북 정책 - 2중전략(打打談)

### 談, 談談打打)

북한의 대남 부장 도발이 최고 통치권자의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일부 강경 세력들에 의해 자행되든지 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생존해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무릇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모택동의 8자 전법 즉, 타격에는 타격으로 대항하면서 회담에 대비하고, 회담에 응하면서도 싸움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는 2중전략(打打談談, 談談打打)을 엄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미국이 70년대 이후 구소련과 데탕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체제 경쟁에서 힘의 우위를 잃은 적이 없었다는 경험적인 교훈도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50여 년이 지나면서 동서간의 냉전과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 오늘에 와서도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분단과 냉전

의 孤島로 남겨져 있다. 그동안 남북 관계에 서도 많은 변천을 겪어오기는 했다. 전쟁 종식으로부터 힘겨루기와 체제 경쟁 속에서 간헐적으로 대화와 교류·협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결의 현실성과 대화의 당위성이라는 '2중의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한 가닥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바로 북한에 있어 혁명 전략 고수와 개혁·개방의 양자 택일의 선택 시기가 점차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혁명 전략 고수에 입각한 최후 수단인 동원(무력 도발)에 대비한 안보 태세 확립과 개혁·개방으로의 전환에 따른 협력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데,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이 없이,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때이다. 統